

[성명서]

2021.8.27.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http://media.nodong.org/>

윤석열 캠프, '언론 적폐 인사'의 완성체를 자처하는가 -이진숙 언론특보 임명 철회하라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선 캠프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합류시켰다. 이 전 사장에게 언론정책을 맡길 모양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자아내는 인선이다. 윤 후보의 언론관에 대해 언론노동자들이 고민도, 기대도 하지 않아도 됨을 방증한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언론재갈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인과 가족문제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은 계속 이어가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더니 급기야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언론장악에 몸과 마음을 다했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영입했다.

이 전 사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MBC보도본부장을 지냈다. 사고 당일 뉴스로 '유가족의 보험금 산정'을 했던 그때의 책임자로 이후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전 사장은 대전 MBC 재직 당시 “언론의 정치적 독립 훼손,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인 탄압에 앞장선 전현직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로 제2차 부역자 명단(2017년 4월 11일)에 포함된 인물이다.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하더니 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던 인물을 언론특보로 삼았다. 윤 후보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적 언론인들의 언론중재법 반대 전선에 정략적으로 손가락을 얹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합리적 의심은 이 전 사장 영입으로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써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는 '언론 적폐 인사'의 완성체가 됐다. 배우자의 총선 후보 출마 지지 문자와 편집권 침해 논란으로 부산일보 사장에서 물러난 안병길 의원(24일 후보본부장 사퇴), 기사시절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폄훼한 글을 썼던 고영신 전 KBS 이사, 중대 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들에게 '때밀이들'이라며 모욕한 정찬민 의원에 이진숙

전 사장까지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진숙 전 사장에게 요구한다. 자신의 과거와 탄압받았던 언론인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를 사퇴하라. 그것만이 당신이 '재갈을 물렸던'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윤석열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이 전 사장의 영입 자체만으로 대선 언론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로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면 이진숙 임명 철회로 진정성을 증명하라.

2021년 8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